

檢 ‘성추행 셀프조사’ 논란에 공수처 급부상

현직 의원·법무장관 등 고위직 상대 진상조사 부담

조직 구성 등 4건 설치법안 제출…국회 논의 ‘관심’

검찰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서 ‘셀프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고위 간부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데다 고검장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법무부 장관 등도 조사할 필요성이 거론되는 국면에서 검찰의 자체조사만으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게 ‘셀프조사’ 논란의 골자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부장검사급)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고, 자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서 검사는 주장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캐야 하는 검찰의 진상조사 과정에는 여러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각에서 흘러나왔다. 검찰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의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앞세운 진상조사단의 철저한 의혹 규명과 외부 민간위원의 조사단 참여 등을 공언했지만 사건을 전모를 제대로 밝혀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서 검사가 의혹을 폭로하기 전 법무부와 검찰의 상관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조사 대상이 될 검찰 내부 인사들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는 점도 진상조사단

으로서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의 범죄 수사를 전담할 독립 기구인 공수처 설립 논의가 새삼 시선을 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내부 비리를 중립성 논란 없이 파헤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로 공수처 도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의 수사·기소를 전담할 공수처의 설치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법조계 안팎각에서 흘러나왔다. 검찰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의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앞세운 진상조사단의 철저한 의혹 규명과 외부 민간위원의 조사단 참여 등을 공언했지만 사건을 전모를 제대로 밝혀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서 검사가 의혹을 폭로하기 전 법무부와 검찰의 상관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조사 대상이 될 검찰 내부 인사들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는 점도 진상조사단

으로서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들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로 바뀌었다. 공수처 설치 법안 4건도 사개특위로 이관됐다.

지난달 24일 첫 여야 간사 회동을 한 사개특위는 소위원회 구성 문제와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들을지 등의 쟁점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1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범법행정처 등의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공수처 논의는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루기로 했고, 문 총장의 업무보고는 다음 달 13일 받기로 합의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 논의가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논의에 속도가 안 붙었던 게 사실”이라며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여러 사법개혁 사안 중 공수처 논의와 맞닿을 만한 화두여서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시급한 의제로 밀어붙일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아동수당’ 공방

민주당 “전 가구 지급 필요”…한국당 “합의 뒤집어”

여야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동수당을 모든 대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소득수준 상위 10%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난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가 안 돼 여야 지도부 합의로 결론내린 내용을, 복지부 장관이 번복했다”며 “국회를 통법부 수준으로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전(全)가구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옹호했다.

전혜숙 의원은 “아동수당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세금은 달리 내더라도, 혜택은 같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장관 소신에 의해 얘기한 것인데, 국회 합의를 깬다는 쪽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정춘숙 의원은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 소외되는 인건비와 금융통보비용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서 “약 200억원을 절약하자고 아동수당의 의미를 변질시키며 선별 지급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합의한 것은 준수해야 하며, 행정부는 이를 집행한 의무가 있을 뿐 그걸 번복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성태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한국당 교섭단체대표연설 취학 앞당겨 선거연령 18세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이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와 관련,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

를 넘어서는 것”이며 “권력구조 개편 없는 속 빈 강정의 ‘문재인 관계개선 쇼’는 이제 곧 막을 내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권형 개헌으로 새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7세로 앞당기는’ 패키지 방식의 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이 다시 묻고 있다”며 “정치·정책·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두 국민 정치’는 또다시 진영을 나누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선거 앞 시도당 위원장 출사퇴…재편되는 與 지도부

출마자들 130일전 사퇴해야

서갑원·서삼석·신문식 등

전남도당 위원장 물밑 경쟁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폭 재편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도부 재편은 아무래도 지방선거 공천 등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권역별 최고위원을 맡은 시도당 위원장들의 출 사퇴가 이뤄진다. 당헌·당규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당 위원장들은 오는 13일까지(선거 120일 전) 사퇴해야 한다.

권역별 최고위원 가운데 인천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박남춘 인천시장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9일) 이후 사퇴할 예정이다. 박 최고위원의 후임은 새로 선출되는 인천시당위원장이나 경기도당위원장이 협의해 맡게 된다. 후임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윤관석 의원이 거론되며, 전해철 의원의 사퇴로 공석인 경기도당위원장에는 박광온 의원이 단수 지원해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도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퇴한다.

이 의원은 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13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후임 권역별 최고위원은 새로 뽑히는 전남도당위원장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후임 전남도당 위원장이



1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전남기자협회 공동주최 ‘개혁공천을 위한 지방선거 합동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올바른 개혁 공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전남도당 상무위원회의 의사를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남도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갑원 전 국회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 신문식 전 국회의원 등이 치열한 물 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전남도당위원장 대행 체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당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확산된다면 지방선거에 악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우남 최고위원도 도당위원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대전시당위원장인 박병계 최고위원의 경우 대전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권역별 최고위원 자리는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완주 수석대변인에게 넘기기로 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 최고위원의 경우 애초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

이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이 가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시도에서 선출된 시·도당 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권역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을뿐더러 최고위원회의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전처럼 다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업 사회적 책임 명시·소상공인 보호 조항 신설

민주 개헌 의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는 개헌안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소상공인 보호 조항도 신설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명시했다. 또 예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당 개헌 의총회 후 민주당의 개헌안 논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 대변인은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와 관련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될 듯하다”고 말했다. 현행 조항에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

구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제 대변인은 또 “헌법 제123조의 중소기업 보호 규정에 소상공인 보호 조항도 신설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 대변인은 “헌법 제54조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55조에서는 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정부 동의를 구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이번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관련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될 듯하다”고 말했다. 현행 조항에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

강력 추천합니다. 010-3605-5000

※ 구례, 그랜드 호텔 매매 ※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1
- 지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세미나실/사무실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정도
- 감정가 / 시세 - 20억 매매 - 13억

※ 나주, 2층주택(전원주택/별장) ※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3월초 입주 가능
- 시세 - 1억 매매 - 7200만원